

언론의 적응 저널리즘적 성향에 대하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교수

방 정 배

I. 머리말

여론형성과 전달을 왜곡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기능을 양산하는 사회적·역사적 조건들은 한마디로 언론이란 현실을 저질화시키는 기본요인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지적하고 문제삼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언론을 저질화 및 악성화 시키는 몇가지 요인들을 분류하면 적응저널리즘, 선정주의, 상업주의, 대중적 황색화 및 나태한 권위주의란 다섯 범주로 집약할 수 있겠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론중독을 야기하는 언론인의 직업의식결여와 매체조직의 비민주적 구조적 흠결 등의 뿌리를 캐보며, 규범적으로 구조화되고 기능해야 할 당위언론의 상을 그려봄으로써 한국언론의 실태를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요인들과 관련하여 신문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한 사회의 언론체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계 등의 하부체계와 같이 하나의 종체계로,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나름의 특유한 하부구조를 가지고 그에 조응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타 체계들과의 상호작용가운데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함은 바로 언론의 정치·경제적 사회통합 및 교육적 문화 예술에 행사하는 기능과 영향을 의미하게 된다. 다원적 하부 체계들의 존재유무에 대한 중요성의경중을 논함은 무의미하나 다만 정치·경제체계의 중요성과 필연성의 결정적 계기는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한 사회의 정치체계와 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언론과의 구조적 등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중매체의 민주적 매카니즘과 민주적 기능의 결정적 중요성이 창출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공적 언론조직구조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조직의 민주화의 형평적 발달의 상호교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언론이 민주정치의 타락에 책임이 있다.」(주 Dovifat)함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것 이며 그 역도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다. 민주정치의 타락은 바로 언론의 구조와 조직과 기능의 타락을 물고 오는 것이다.

II. 정치적 영역에서의 언론과 여론

J. Habermas 는 「공개장의 구조변화」 에서 『공적 여론은 도덕의 이름으로 정치를 이론화(rationalisieren)한다』 라고 여론의 민주정치에서의 도덕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성을 소유한 구성원들의 공적인 의견은 그 이성의 바탕으로 비판의 과정을 거쳐(이성의 본질적 활동은 잘못과 허위를 고발하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형성되기에 제일 진리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합리에 항거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 다수개인의 행복의 전제조건인 자유를 보장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를 가진 진리의 제도인 민주정치를 그래서 여론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장으로서의 여론이 오늘날은 주로 대중매체인 신문 · 방송 등의 언론에 의해 형성되고, 형성된 여론을 중재하고 전달하고 재생산하며 정치과정에 투영, 민주정치 자체를 가능케 하는 권력규제 성격을 가짐으로 언론의 민주사회적 과업과 기능이 돋보이게 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정치」를 모토로 하여 출범한 제 5 공화국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민주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정치철학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기에 대화정치, 토론을 통한 국민 의사수렴, 민의반영 등 여론을 중심부에 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개념들이 존중되고, 공익과 공적 ·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한국적 언론상 부각에 초점을 둔 언론기본법까지 만들게 된 것 같다. 여기서 중요시 되는 개념은 바로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짚어준 언론에 대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책임이냐에 대해선 현대 민주적 감각에서 분명히 드러내 놓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도, 안저도 좋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워터게이트사건에서 국가 권력기관인 백악관이 언론에 대해,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언론」이라고 했을 때에 언론의 책임은 백악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공」의 개념은 봉건 혹은 전제군주 정치체제에선 국가기관 등의 통치기구와 제도는 모두 공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고 겨우 시민혁명으로 정치권력의 절대성에 도전하게 되면서 의회가 성립되고 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공의 개념은 국가에서 사회어로 옮겨움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권리 · 자유를 위한 민주운동의 결과, 공의 개념이 내용과 질의 변화를 겪었다는 말이다. 공의 개념이 질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 민주화의 역사적 산물임은 「public」이나 「offentlich」등의 외국어에서 볼 수 있고, 「publicity」 혹은 「ofentlichkeit」를 형성해 내는 커뮤니케이션 장의 언론학적 용어에서는 권력견제 비판기능으로 민주주의 개념의 핵으로 등장됨을 볼 수 있다. 언론통폐합후 언론의 공적 책임, 공영방송 · 공공역할 등에 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은 「offentlihkkeit」의 필연성을 부각시켜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는 매체이지, 여론 그 자체는 아니다. 기술적 수단을 전제로 하는 이런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장(정신적·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견을 형성, 중재하는 역할을 통한 여론 순환·재생산에 작용하는 하나의 민주정치에 적극적 의미를 의는 제도인 것이다. 민주제도는 주권주인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주권주인은 국민이 정치과정에 방관자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함을 의미하기에 정책결정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의견을 투입할 수도 있는, 즉 간단히 말해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이런 민주과정을 가능케 하는것이 바로 언론의 공적 사명인 공개장의 형성 및 제공이다. 결과적으로 공개장을 형성, 제공하는 언론의 「공적」 역할은 「민주정치적」 역할로 귀착되는 것이다.

언론기본법에서 명시한 공공의 정신에 뿌리박고 있는 한국언론은 과연 공개장 및 공개성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기능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반민주적 역기능을 말해야 할 것이며 그런 역기능을 창출한 언론의 구조적 모순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Ⅲ. 비판기능과 규제기능

권위주의적 전제 국가나 절대주의국가에서는 국가가 「공」으로서 유일한 언론자유와 의견자유 의 적이었고 (권력의 권위와 신비에 정면도전이 되었으므로) 민주주의는 의견의 자유와 비판적 공론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받는 제도이다. 민주정치는 권력도 전지전능의 존재는 아니라는 가정 위에 성립되기에 그렇다. 여기서는 규제와 비판이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적 필요선이 된다. 현대 민주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주의에서처럼 용기있는 민주투사적 언론인에게만 전적으로 비판 규제기능을 일임하지도 않는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잘못된 지적은 사회의 여러 그룹과 조직에서도 일어난다. 즉 야당이 정부를, 정부가 야당을 비난하며, 노조가 기업주를, 기업주가 노조를 나무라며, 개별국민이 또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비판하는 등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징이 바로 이해와 관심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낸다. 그 결과,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비판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모순, 충돌, 이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전제요건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런 다양한 불협화가 내포된 사회적 대화가 공적으로 공개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나 사회모순이 은폐와 왜곡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러한 공개장을 언론이 형성해줘야 한다. 여기에 바로 한국언론의 공공적·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사회는 정지하거나 죽어있지 않고 움직이기에)사회적 토론과 대화와 불평의 소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공적토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요 과제이다.

오늘의 신문은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 시대의 언론도 항일투쟁지적 구국언론적 신문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지도자적 기능이나 교육·계몽적 사회기능을 강조하여 언론인이 마치 우국지사처럼 자기의 정견을 선도하고 국민을 가르치고 깨우치려는 사명감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오늘의 민주언론은 충실하고 정직한 소개인, 조정인의 입장에서 사회의 「정신적 교환」을 돌보고 책임지는 전문인이 필요하지 우국지사나 카리스마적 인물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신없는 언론인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는(정신적 교환) 선, 소개인 및 조정자, 후,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즉 선, 공적의 사회자, 대화유발자, 후, 공권을 가진 대화자로서의 직업윤리가 확고해야 되리라 본다. 그래야 재판에 앞선 생사람 잡는 「언론의 판결」 즉 Y유치원 화재사건 보도에서 들어왔던 경찰 수사에 앞선 「화재 판결」로 실제화재로 입은 손해보다 언론피해가 훨씬 더 커 아직도 그 언론 피해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Y유치원의 원성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언론이 건전한 공개장형성을 위한 성실한 중매자가 된다 함은 정치의 민주화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정치적 공개장일 경우에는 권력과 부를 장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꺼리낌 없는 비판과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재·공개·공명토론의 사회자 노릇을 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제시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권력과 부와 사회적 우위를 빙자하여 공개적 비판과 토론을 거치기를 꺼리는 집단에 언론은 용감해야 하고 공개를 두려워하는 「켁김」을 파헤쳐서 공익의 이름으로 문제삼을 의무가 따른다. 대화와 토론의 화합을 위한 민주정치란 이해가 대립되는 사회집단, 단체들이 동권을 가진 동반자란 전제하에서 성립된다.

다시 말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나 하향식 전달만이 있다는 경직관념에서 해방되었을 때 공개정을 말하는 언론이 될 수 있겠다.

그 예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여러 집단이나 대중의 의견을 접합 가능케 하여 공적토론의 중재자, 민주언론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언론이 공적토론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단순한 사실 보도에 국한될 경우에는 언론의 공적 임무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과 함께 단순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존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공적토론에 적극 개입하여 대화나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고 표현(동반자들의 특성을 관찰하여)이나 비판 등의 주장이 침체한 때 강화, 조정하는 목적의식이 조정자로서의 언론에 필요하게 된다. 자기구미에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논의와 공론만 중재한다면 황색언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민주사회에서는 별 볼일 없는 낙제생언론으로 전락할 것이다.

IV. 적응 저널리즘

공론의 중재자로서 언론이 유의해야 할 점은 현실사회상황에 적응만 잘하는 신문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문이란 것이다. 서독 신문재벌 쉬프링거가 발행하는 빌트(Bild)짜이통을 필두로 한 류의 언론을 대표적인 적응 저널리즘이라 할 수 있는 예인데 한국 언론이 대중언론으로서 이러한 「적응언론」의 나태에 빠져 있거나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현실은 인간행위가 변증법적으로 어우러져 표현된 것이기에 모순과 갈등이 빚어내는 나쁜 점도, 또 이것들을 극복, 조화 · 통합하는 좋은 면도 있다. 언론의 공적 사회적 과제는 바로 이 나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해 주는 데서 개선과 통합을 향한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점을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나쁜 점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기능이 훨씬 더 공적인 적극성을 띠고 보여진다.

위에 언급한 빌트짜이통은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대중신문(Massenpresse)이지만, FAZ(Frankfurt Allgemeine Zeitung)나 SZ(Süd Deutsche Zeitung)같은 양질의 신문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빌트짜이통 신문의 특징은 인기에 영향하기 위해 신문문장의 서술방식을 단순하고 읽기 쉬운 문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감정에 (이성보다는)호소하는 형식으로 수백만 독자의 바램에 영합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그 자체가 비판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론중재」를 언론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회의 여러 다른 입장을 서로 연결, 사회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지 못하는데서 언론에 대한 비난의 초점이 모아진다. 공론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적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빌트짜이통은 비커뮤니케이션적 언론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육개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의 신문들은 시작부터 정론신문, 퀄리티신문으로 출발, 일관해 온 역사성을 지닌다. 그것을 자부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는 언론인이 있다. 공론을 조정하며 사회커뮤니케이션을 원활케 하는 능력을 풍부히 갖추는 특색을 지닌 것이 본질적으로 퀄리티페이퍼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문은 빌트짜이통을 많이 닮았고, 닮으려 하고 있다. 왜 FAZ 나 SZ 혹은 NZZ (쥐리히신문)를 경원하는가? 언론이 공론중재와 의미있는 여론형성에 무관심해질 경우에는 사회커뮤니케이션적 언론상을 상실하게 되고 공적 책임을 외면한 결과를 가져온다.

빌트짜이통의 특징은 속보로 인한 표면적이고 피하주사식 대중효과를 노리는 보도와 대화수준의 현저한 하향조정으로 인한 유치하고 저속한 언어구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신문이 이 특색을 답습하는 것 같아 두렵다. 예컨대 폴란드사태나 우주중계같은 사건보도에서 분초를 다투어 속보경쟁을 하는 것은 인쇄매체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며 경박과

부정확과 저속하고 고립된 왜곡상황을 돋보이게 하는 신문저질화의 원인을 야기한다. 그런 속보성이 강조되다 보면 예컨대 외국의 「실업」 문제, 「교수추천」 문제, 「입시」 문제 등 사회커뮤니케이션에 핵심적 문제들의 왜곡된 도입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외국의 사회적 배경을 무시한 「사건」 자체만 고립시켜 보는 데서 그 개념들이 우리의 「실업」, 「추천」 등의 개념과는 구조적으로 판이하다는 사실을 놓침으로 결국 속보성에서 기인하는 나태한, 동시에 제 눈에 물매기식의 공론조성에 기여하는 아바위 언론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지보성」에 근거할지언정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개념파악으로 심층보도를 하는 것이 보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속보로 인한 오보나 저질의 기사보다 사회구조적 상황이 고려된 양질의 기사는 광범하고 합리적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사가 될 수 있겠다. 부정확한 언론은 인기영합이나 선정을 주목표로 할 때 황색론의 타락상을 보여주게 된다.

우리의 신문이 이런 적응저널리즘에서 헤어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경쟁해 가며 거기에 도취하는 경향을 보임은 문제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적 취약구조와 거기에 얽힌 역기능적인 「장사꾼 기질」이라고 여겨지며 여기에 희생을 강요받는 언론내부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언론의 기업으로서의 내부구조와 공적기능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에는 현실적응이란 적자생존의 살벌한 경제적 삶의 원칙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현대 기술문명과 산업자본주의 대중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론은 이익을 추구하고 근대화한다는 기업으로서의 추구목표와 함께 공적 책임 및 기능이란 사회성을 띤 공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민주 언론의 목표를 공존해야 할 입장에 있다. 기업은 자본을 투자하고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이란 소비처를 필요로 하며 이윤을 남기고 또 재투자하는 기업본능에서 이탈할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를 합리화하며 또 미덕으로 생각한다. 아도르노(Adorno)같은 사회철학자는 바로 여기에 언론과 자본주의사회를 미화하고 확인해 주는 언론의 보수성에 비판을 가하면서 범법자(Verbrecher)라고 까지 언론의 죄악성을 들춰 내려고 한다.

우리 언론의 지병이라 생각되는 공기로서의 언론의 민주사회 역기능 현상은 다른 차원에서 언론기업의 구조적 모순과 결함에 기인하고 있다. 적응저널리즘이란 혹은 달고 언론공해에 한몫을 담당하는 한국언론의 저질화 및 비커뮤니케이션적 병폐는 어느새 장사꾼으로

탈바꿈한 언론재벌에게만 탓해 봄은 온당치 못한 푸념일까? 서구언론은 시장을 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출발하였으나 점차 신문의 성격이 정치적, 사회적기능이란 공적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문제는 바로 언론의 과제가 공적 임무수행이란 측면을 가지면서 언론자체의 존립은 시장에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 세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칼 · 뷔커 (K Bucher)는 이미 일차대전 전에 「신문은 편집면을 통해서 기업적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과연 오늘날의 언론은 후기자본주의사회의 매체조직으로서만 존재 가능하게 되었다. 환언컨대 후기 자본주의사회는 생산 및 기술합리성의 고도발전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생산조직과 구조가 전문화 · 다양화 · 분업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 그런 사회구조에 맞춰 언론조직도 생산의 기술합리적 조직성을 바탕한 기업이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메시지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의 순수 언론인들의 편집조직과 기술수단의 운영 및 신문이란 「상품」을 조직 · 보급 · 시장개척 등의 형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 조직으로 크게 분화하여 권익과 이해를 달리하는 이원조직적 언론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신문이 하나의 「상품」의 성격으로 존재하게 되고 상품시장의 법칙이 언론에 도입되는 현상은 막을 길이 없게 되었다. 상품의 수요가 크면 클수록 대량생산에로의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에 부응하여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언론기업은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구미 선진국에서의 신문경영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면, 언론기업의 신문종류와 유형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대략 광고수입 70% , 구독료 30%정도로 재정을 총당하고 있다. 서구 신문의 재정총당은 정차 광고수익이 강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런 비율은 한마디로 언론의 존립자체가 경제景氣 및 세력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불안한 것은 언론의 독립이란 말할 필요 없이 경제적 안정토대 없이는 불가능하고 언론자체 존립도 허물어진다는데 있다.

경제적 토대인 광고의 의미는 대량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전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도 대량생산과 소비의 경제법칙이 언론에 결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문도 어쩔 수 없이 기업적 조직을 갖고 동일한 생산법칙에 의해 일반 상품같이 제작, 판매된다. 그리고 해당 소비시장 확보하기에 경쟁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경쟁에 지면 자본주의적 경제자체법칙에 따라 영세 언론기업은 적자생존에서 죽어가게 된다. 즉 시장확보가 잘 안됨은 독자화보가 안됨이요, 독자가 적음은 신문이란 상품의 소비가 부진함이요, 소비가 부진함은 신문부수의 후퇴를 의미한다. 부수후퇴는 또한 광고료의 하락으로 생계의 줄이 끊어지게 되어 언론이 망하는 법칙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을 외면한 언론이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그 예로 60년대부터 자본주의 언론계에 불어 닥친 세계적 언론집중 및 병합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영세 언론기업들의 대거 소멸을 의미했다.

VI. 언론매체 사유의 역사적 의미

커뮤니케이션을 흔히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또한 매스컴은 기술과 대중사회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산업사회에서 민주과정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는 것은 민주주의발달 자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기술적 수단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요, 대량생산의 경제법칙에 종속되는 사회과정이므로 사유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산사회에서 언론이 출발했다면 이는 분명 정치 및 통치수단으로서의 정치적 의미 이외의 별 뜻이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매스컴의 발달이 자본주의적 산물이었고 언론이란 수단이 사유형태를 취함으로써 국유나 권력의 장악에서 벗어난, 권력의 전횡에 시비를 논할 수 있는 자립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언론조직의 사유는 민주사회적 과정으로, 제도로써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매스컴이 국유나 종교단체기구의 한 하부기구로만 존재형태를 취할 때는 공산체제의 언론에서 보듯 이데오로기 전달이나 지배합리화를 위한 민중조작·조직·동원 등의 통치수단 및 권력의 다른 손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래서 언론의 사유제는 일단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란 언론외적 자유를 갖게 되고 언론기업이란 사유제 특유의 이윤활동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문제는 정신적 생산을 생산하는 순수 언론인(편집)의 공적, 사회적 직업의식과 이윤추구적 기업이데올로기와의 충돌에 있다.

언론조직이 자본소유에 의한 경제조직일 경우매체기업 내부적 위계질서는 소유에 의해 중재된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것은 경영 및 언론자본가의 기업적 제권리가 편집과 순수언론인(기자)의 복종이란 토대위에서 향유됨을 말하고 결과는 언론의 공적 혹은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인 대신에 장삿군으로서의 문화산업만 존재하게 된다.

소위 언론의 내적 자유란 이런 언론기업 내부적 경제종속과 횡포에 짓밟힌 편집권 및 언론인들의 제권리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조직의 구조적 모순이 한국 언론의 특징같이 생각된다. 한마디로 언론내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언론조직에선 건전한 사회적공적 책임언론을 영위할 수 없는 본질적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곳에 국가의 언론정책이 개입할 수 있다. 원래 국가는 공적 언론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에 간섭을 안하면 안할수록 외적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좋다. 단지 필요불가결한, 즉 언론자유가 이처럼(경제횡포에 의해 희생되는 곳)침해되어 의사형성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언론정책적 차원에서 이룩된 언론기본법의 명시적 언론내부 자유보장은 너무 허약한 것 같다.

언론의 공적 역할은 체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순수 언론인의 대표격인 편집국장 임면이 경영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적어도 기자들의 의사가 참작되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아쉽기만 하다. 이렇게 언론내적자유가 자유롭지 못할 때는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사명이나 임무같은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고 오히려 피로해지게 되고 오로지 언론자본가의 기업 이데올로기에 물이 들게 되어 결과는 상업 언론의 병폐가 날개를 치게 된다. 이러한 언론기업의 상업화는 언론과 시장을 매개하고 있다. 시장과 언론과의 기능관계는 무특색의 「싸구려」 대중신문, 황색언론적 불바(Boulevard)언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특색의 대중신문은 -이것은 하향조정된, 평준화된 다수독자의 구미를 의식하는 의미에서 엘리트 신문 및 퀄리티 신문의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 일반독자에게 저속하고 평준화된 내용의 신문만 만들면 성공한다는 비커뮤니케이션적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신문의 수준은 국민 교양교육에 이바지해야 하는데도 수준 이하에 머물게 되고 공공적, 공익적 합리성 대신에 독자의 감정을 자제하고, 끊임없이 들떠있게 해놓는 제작방향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센세이션을 몰고 올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고 더 열광을 불러 일으키려는 시도가 언론에 잠재하게 되어 언론의 사회적 「공」 염불은 「공」 염불이 되고 비정론신문으로 떨어진다. (이런 경향은 여대생 피살 사건이나 윤보살 피살 사건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각 일간신문의 사회적 메시지의 중요한 핵을 이루는 사회면을 분석하면 더욱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6, 7 단의 지면에 7~8cm 이상의 새까만 「컷」에다 굵직한 제목 몇 개 뽑고 큼직한 사진 몇 개 집어 넣어 놓으면 결국 본문이차지하는 지면비율이 너무나 축소돼 버린 내용 없는 전형적 「감성신문」의 특징적 약점을 신문에서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중이 읽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것을 의식하다 보니 결국 그들에게 그림으로, 「컷」으로, 커다란 제목으로 원색으로 기사를 미화·분장하는 작업이 언론의 본목적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이러한 짐은 또한 다수독자가 원한다면 그들의 구미에 맞춰 무엇이든지 제공하여 판매 부수를 늘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국언론의 비커뮤니케이션적 선정화, 「불바」화를 촉진한 장본인은 언론기업가의 상흔에 매도의 눈초리를 보내는 많은 관심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VII. 맺는 말

결론적으로 몇 가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보면 첫째, 보도기사의 경우는 사건과 과정의 주변적 흥미 등 센세이션과 선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감하게 핵심을 찌르고 파헤치는 공론중재적 언론인상 및 문제의식을 가진 비선정적 개성있는 저널리즘의 정립이 요청된다. 일시적 오락이나 선정보도로 독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의 흥미와 취미에 맞추다 가는 정론지적 고급정통언론의 질을 타락케 하는 황색화, 상업화, 편의주의적 적응저널리즘화를 물고 올 것이다.

센세이션이나 대중오락에 몰두하는 대중언론은 한국적 현실에서 도시문화나 악성 소비문화양산과 무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농촌문화의 황폐화 및 파폐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언론의 센세이션널리즘 숭배사상과 저질 대중오락 지향적인 결과에서 유래되는 사회적 역기능에 관하여 언론인들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언론의 이기적 소비수요 창조기능은 이 글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으나 Freud 적 의미에서의 인간본능적 욕구에 호소하는 획일적이고 특색없는 대중신문의 가수요창출기능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점은 특히 특색있고 개성있는 정론 신문·대중신문·문화란 변신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골문화나 향토문화의 재건은 민족문화 육성의 측면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지방정보의 평가절상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시골문화의 평가절상이란 도시문화와 소비문화가 일방적 우위를 점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대될 수 없고 이런 평균적 도시소비문화의 물신화에 대중신문이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문의 사회적 역기능이 누적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보도 경제보도의 경우, 심층보도·배경보도가 해설형식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다. 국민의식화 작업에 신문의 역할이 크다 함은 바로 국민의식의 민주화외 정치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민주정치적 무관심이나 현실도피적 안이함에서 탈피하여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참여란 신문이 관심표명과 참여의지의 활성화란 점에서 모든 분야의 결정과정에 방관자로서가 아닌 충실한 중매자로서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하고 다질적 사회적 주장들을 교환, 보도, 강조하는 일이 신문에게 필요하겠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다질적인 주장 등의 사회적 정보 교환은 언론의 민주적 조직이나 구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은 이를 인식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성만 강조하는 언론조직의 매카니즘을 지양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론조직의 민주화 목적은 사회정보의 왜곡없는 조정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경쟁성을 자본이 아닌 민주적 언론구조의 재편성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언론수단, 즉 대중매체의 다양성은 다수 사회집단의 의견다양성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거니와 공론조작의 위험성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셋째, 속보성이나 현장감 넘치는 보도를 위해 신문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파매체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편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매체의 속성으로 보아 속보성이나 현장감 넘치는 보도는 시청각을 동시에 동원하는 텔레비전을 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이 분 초를 다투어 보도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오히려 미확인보도나 추측기사의 남발을 초래하고 정확성이나 객관성 및 성실성을 결여한 기사의 증가만 가져와 언론 저질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얼마전 신문에 보도된 「X 고졸 배구선수 J 모군, S대에서 납치」 제하의 사실을 왜곡한 보도는 스카웃에 진 측을 동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뿐 공적 임무를 망각한 한국언론의 원시성을 그대로 노출한 대표적 사례라고 보인다. 이런 기사의 감정적인 보도는 그 이면에 속보성과 선정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인쇄매체의 수용자가 보는 독자가 아닌 읽는 독자임을 명심한다면 신문이 이상적인 것이나 컷이나 색채사진 보도 등의 행위로 기사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요식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신문은 그러한 지면구성보다는 오히려 기사의 충실화 (정확성, 객관성, 정직성, 신빙성) 및 심층보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사건보도는 특히 기사 출처의 총체성을 파악하고 보도하여 여론창출적 능력을 가진 언론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언론의 선정적 센세이션널리즘과 상업주의, 적응주의 및 무성실하고 나태한 편의주의 등은 비커뮤니케이션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언론이 야기됨을 명심하고 바람직한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중앙대학교, 원혜대학교, 잘츠부르크 대학교(신문학 박사)

□ 저술 : 「국민지의 정치적 배경과 공시적 기능에 대하여」(독), 「서독 사민당의 언론정책」(독)

□ 현재 성균관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